

전주시의 상대적 저성장에 대한 원인 고찰: 광주 및 대전 광역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성욱*

Cause on Relatively Low Growth of Jeonju City: Focus on Comparison with Kwangju and Daejeon Metropolitan City

Sungwook Cho*

요약 : 본 연구에서는 1900년대 이후 전주시가 근접에 위치하는 대도시인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성장을 하게 된 원인을 살펴봤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전주시의 상대적 저성장의 원인은, 첫째, 1896년 13도제의 실시로 배후 지역이 전라도에서 전라북도로 축소되었던 점, 둘째, 1935년 부군 분리 시에 인구밀도에 비해서 전주부의 행정구역이 상대적으로 좁게 설정되었던 점, 셋째, 부군 분리 이후 행정구역의 확대 과정에서 확장 시기와 속도가 늦었던 점, 넷째, 1960년대 이후 배후지역의 인구흡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주요어 : 13도제, 1935년 부군분리, 행정구역 확대, 상대적 저성장, 배후지역

Abstract : In this study, research the cause of the relatively low growth of Jeonju city compared to Gwangju and Daejeon metropolitan city since 1900s. Summariz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Jeonju city has been shrunk the hinterland from Jeolla-do Province to Jeollabuk-do Province by 13 regional district institution in 1896. Second, setting a relatively narrow administrative area compared to the population density in 1935 which was Bu and Gun separation period. Third, the expansion process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was not proper in time and pace. Fourth, relatively low absorbed in population from the hinterland since 1960s.

Key Words : 13 Regional district, Bu and Gun separation in 1935, Administrative area expansion, Relatively low growth, Hinterland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전주는 조선시대 8도 중의 하나인 전라도의 중심지였으나, 1900년대에 주변의 광주와 대전이 급격하게 성장한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주는 통일신라시대 9주 5소경제(685, 전주)에서 지역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고려시대의 5도 양계제

(1018, 전라도)와 조선시대 8도제(1413, 전라도)에 의해서 전라도(전북, 전남, 제주도 포함)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1896년 13도제의 시행으로 전라도의 중심지에서 전국 13도의 하나인 전라북도의 중심지로 배후지역이 축소되었다.

전주, 광주, 대전은 모두 호남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도시들이고, 호남선 철도를 축으로 전라선(전주)과 경전선(광주)으로 연결되는 도시들이다. 전주시에서 대전광역시까지는 약 80km, 전주시와 광주광역시는 약 100km의 교통

*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ssw@jb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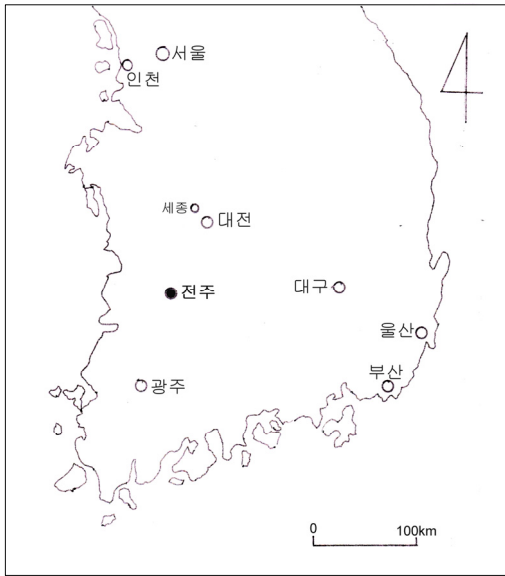


그림 1. 전주, 광주, 대전의 위치

거리에 위치한다(그림 1). 현재 3개 도시의 인구규모(2015)는 대전광역시 1,538,394명, 광주광역시가 1,502,881명, 전주시가 658,172명이다. 도시면적(2015년 기준)은 대전광역시가 539.83km², 광주광역시가 501.44km², 전주시가 206.24km²이다.

도시의 성장은 도시 내부의 경제적·사회적·자연환경적 요인에 의해 인구의 밀집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와 도시와 주변 지역 그리고 큰 지역 규모에서의 위치 특성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도시 성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도시의 행정구역 면적과 같은 공간적 요소도 도시로의 인구이동과 지역개발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것은 행정과 제도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라도 최대의 도시였던 전주시가 1900년대 이후 주변의 광주와 대전에 비해서 대도시로 성장하지 못한 원인으로 이러한 행정 및 제도적인 측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 지역과 주변 지역의 관계에서 1945년 해방과 1960년대와 같이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에 도시의 행정구역 설정 및 면적의 크기는 도시 성장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도시 내부의 성장 유발 요인과 인구 흡수 요인, 그리고 인구의 사회적 이동을 담아낼 수 있는 행정구역의 크기, 주변 지역과 도시 지역의 관계에서 도시 지역의 인구 흡인력과 주변 지역의 배출 크기, 지리적

위치 및 교통 조건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은 지역 중심지로서 도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도 최대의 도시였던 전주시가 1900년대 이후 주변의 대도시인 광주와 대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성장을 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 성장 요인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히 행정구역 설정과 그에 따른 인구변화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도시 성장과 요인에 대한 연구 경향

도시성장에 관한 이론들은 경제 활동의 기반산업을 도시성장의 원동력으로 보는 수출기반이론, 도시의 생산 능력과 생산 요소의 도시 간 이동을 성장 요인으로 보는 신고전학파이론, 승수효과에 기반하여 도시 성장이 누적된다는 누적적 인과이론, 지역의 중심 도시기능과 역할에 의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중심지 이론, 도시의 선도적 산업과 집적 그리고 확산이 도시 성장을 이끈다는 성장거점 이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주상현, 1998:84). 또한 도시성장 관련 이론을 공간적 패턴 변화, 경제적 측면, 주변도시와의 상호 작용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윤병훈 등, 2014). 그리고 도시성장을 도시 내부의 성장 요인에 초점을 두는 도시적 시각과 도시와 주변 지역과의 기능적 연계 측면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는 지역적 시각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정환용, 2003:207).

도시성장의 변화과정에 대해서 Hall and Hay(1980)는 도시발달과정을 감소집중(centralization during loss), 절대집중(absolute centralization), 상대집중(relative centralization), 상대분산(relative decentralization), 절대분산(absolute decentralization), 감소분산(decentralization during decline)의 6단계로 제시하였다. 또한 van den Berg *et. al.*(1982)은 도시 지역의 인구변화를 지표로 하여 도시화(urbanization), 교외화(suburbanization), 반도시화(disurbanization), 재도시화(reurbanization)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도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서는 구조적 관점과 기능적 관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조상필, 1994:226), 구조적 관점은 도시 자체가 지니고 있는 내적 요인과 도시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능적 관점에서는 공간임지적 요인, 인구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박연수(1997)는 도시성장을 결정하

는 주요 변수를 경제적 변수(일자리, 소득, 실업률), 사회적 변수(교육, 중심성), 환경적 변수(패작성, 편의성)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유사한 수준의 자원을 가진 지역 간에 나타나는 성장차이의 설명에서 전통적인 이론인 '자원의 불균등 배분'의 설명의 한계를 지적하고, 진화론적 경제이론에 근거한 경로이론(path dependence theory)과 회복력(resilience) 개념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신동호, 2017).

우양호(2016)는 우리나라의 대도시를 인구 200만 이상의 대도시와 50만~100만의 소규모 대도시로 구분하여, 경제적 요인, 생태사회적 요인, 정치경제적 요인, 물리환경적 요인의 4가지 분석 지표를 사용하여 대도시의 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경제적 관점에서는 소규모 대도시(50~100만)는 2차 산업이 도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도시(200만 이상)는 2차 제조업보다 3차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대도시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생태사회적 관점에서는 자연출산율과 인구이동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정치행정적 관점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대도시의 성장을 촉진시키며, 물리환경적 관점에서는 행정구역의 면적이 도시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도시면적의 확대는 규모의 경제, 비용 효율화, 주민생활권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도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성장률의 격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며, 도시 규모도 동태적으로 변화하는데,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성장률이 도시의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최병호·장영재, 2005).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인구이동과 관련되는 생태사회적 요인과 행정구역의 면적과 관련되는 물리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전주시의 상대적 저성장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전주, 광주, 대전의 3개 도시에 관한 연구로는, 먼저 전주시 도시 성장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주상현, 1998)에서 전주시의 도시성장에 미치는 변수로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인구규모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주시는 경제적인 요인 보다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도시 성장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도시내부 구조에 관한 연구는, 전주시의 동서관통도로 개설에 따른 CBD 내부구조 변화 및 성장에 관한 연구(박성오, 1986),

전주 시가지 격자형 토지구획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기원론적 고찰(이경찬, 1997), 전주부성의 성곽발달과 도시계획 연구(장명수, 1994), 다핵화되고 있는 전주시의 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백영기·은석인, 2017) 등이 있다. 77개 도시를 군집분석한 연구에서는 전주를 인적 자원의 질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경제 활성화가 낮아 부양정책수단이 필요한 제3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손정렬, 2010). 이 연구에서는 낙후지역의 저발전 요인으로 자연환경적 요인, 대도시로부터의 거리(접근성), 발전 잠재력 부족(자연환경적, 사회환경적 측면), 국가의 도시정책 및 재정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공간적으로는 이촌향도의 이주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시에 관한 연구로는, 20세기 초 광주시가지 형성에 관한 계획사 연구(김광우, 1994), 광주 충장로와 금남로의 경관변화 연구(조정규, 2002), 광주시 신시가지구의 성장과 공간구조의 변화(이현옥, 2007), 광주광역시 사례로 도시재생정책 지원을 위한 쇠퇴지표 적용 연구(장문현 등, 2016) 등이 있다. 그리고 대전시에 관한 연구로는, 대전시의 토지이용과 기능구조에 관한 다변수 분석(주경식, 1978), 대전시의 내부구조 연구(주경식, 1985), 도시화에 따른 대전의 토지이용의 변화(강신호 등, 2000), 근현대 지도를 통한 대전시의 지역 변화 연구(권선정, 2016)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주시의 상대적 저성장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1900년대 이후 행정구역의 설정과 변화 그리고 인구 성장과정을 중심으로, 전주 주변의 도시 중 대도시로 성장한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와의 비교를 통하여 도시 성장과정의 차이와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3개 도시의 행정구역 설정과 같은 제도적인 측면과 인구변화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II. 3개 도시의 행정구역과 인구 변화

1. 전주시의 행정구역과 인구 변화

1) 행정구역 변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전라북도에는 1부(군산부) 14군 중의 하나로 전주군이 성립되었으며, 전주군은 전주면을 포함하여 20개 면으로 구성되었다(표 1).

표 1. 1914년 3개 군의 행정구역

군 별	1914년 행정구역
전주군(20면)	전주면 , 초포면, 용진면, 상관면, 남전면, 우림면, 이동면, 조촌면, 봉동면, 이서면, 삼례면,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 비봉면, 삼기면, 운선면, 화산면, 동상면, 운동하면
광주군(15면)	광주면 , 지한면, 석곡면, 우치면, 목촌면, 비아면, 하남면, 임곡면, 송정면, 동곡면, 서창면, 대촌면, 극락면, 서방면, 효천면
대전군(12면)	대전면 , 진잠면, 기성면, 유천면, 유성면, 내남면, 탄동면, 구죽면, 외남면, 산내면, 북면, 동면

출처 : 越智唯七, 1917.

표 2. 전주시의 행정구역 변화 과정

연도별	주요사항
1914년	전주군 전주면(20면)
1930년	일부 편입(상관면)
1931년	전주군 전주읍
1935년	전주부, 완주군 분리
1949년	전주시
1957년	편입(초포면, 우전면, 일부 편입(3면))
1973년	일부 편입(용진면)
1983년	일부 편입(상관면, 용진면)
1987년	편입(조촌읍)
1989년	일부 편입(용진면, 구이면)
1990년	일부 편입(이서면)
1994년	일부 편입(김제 용지면, 백구면)
2015년	2구 33동

출처 : 전주시, 2015.

이후 전주면은 1931년에 읍(邑)으로 승격되고, 1935년에는 부(府)로 승격되면서 전주부와 나머지 19개 면지역으로 이루어진 완주군으로 분리되었다. 1935년 부군(府郡)이 분리된 이후,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까지 전주시는 1935년에 분리된 완주군의 3개면(초포면, 우전면, 조촌읍)과 일부 지역(완주군의 상관면, 용진면, 이서면, 구이면, 그리고 김제군의 용지면과 백구면)을 편입하였다. 그리고 3차례(1997년, 2009년, 2013년)에 걸쳐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노력이 있었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표 2, 그림 2).

2) 인구 변화

인구센서스 조사가 시작된 1925년도 전주군의 인구수는 166,135명이었고, 이 중 전주면은 22,683명이었다. 1931년 4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서 전주면이 읍으로 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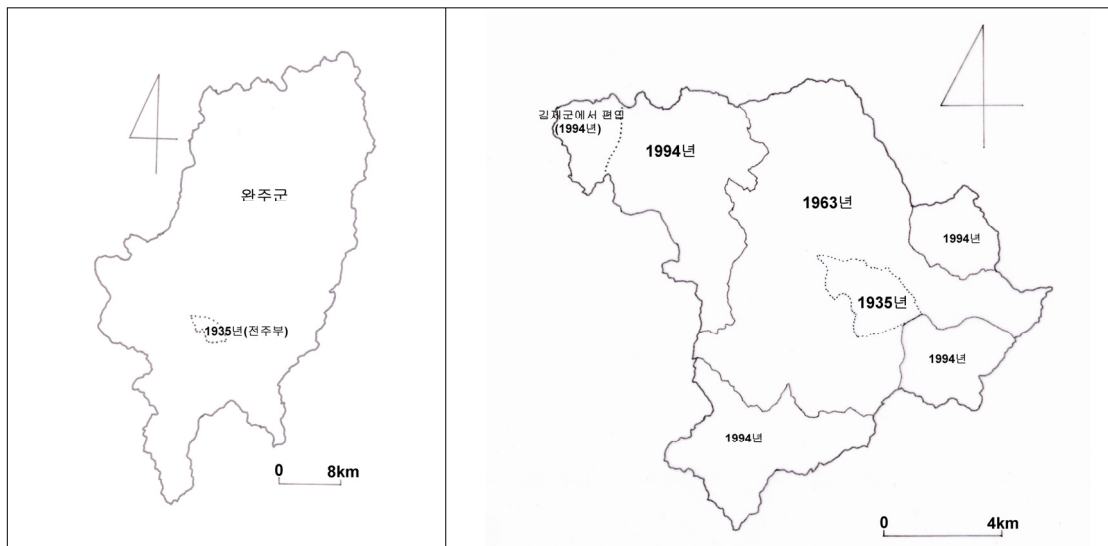


그림 2. 전주시의 시역 확장 과정

출처 : 전주시, 1974; 2009; 2014; 전주역사박물관, 2009.

표 3. 광주시의 행정구역 변화 과정

연도별	주요사항
1914년	광주군 광주면(15면)
1923년	일부 편입(서방면, 효천면, 지한면)
1931년	광주군 광주읍
1935년	광주부,광산군 분리, 광산군 일부 편입(3면)
1949년	광주시, 나주군 일부 편입
1955년	편입(극락면, 서방면, 석곡면)
1957년	편입(지산면, 서창면, 대촌면)
1986년	광주직할시
1988년	편입(송정시, 광산군)
2015년	5구 95동

출처 : 광주광역시,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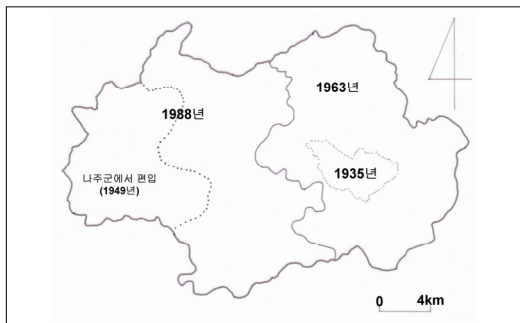


그림 3. 광주시의 지역 확장 과정

출처 : 광주직할시, 1992; 광주광역시, 2015.

격되고, 1935년 10월 1일에는 전주부로 승격되었는데, 1935년 전주부의 인구수 42,387명 이었다. 1949년 전주부가 전주시가 되면서 인구수가 10만 명을 넘게 되고, 1975년에는 30만 명, 1985년에는 40만 명, 1990년에는 50만 명, 2000년에는 60만 명을 넘어섰다.

2. 광주시와 대전시의 행정구역과 인구 변화

1) 행정구역 변화

광주시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전라남도에는 1부(목포부) 22군 중의 하나로 광주군이 성립되었으며, 광주군은 광주면을 포함하여 15개 면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광주면은 1931년에 읍(邑)이 되고, 1935년에는 광주부(府)로 승격되면서, 나머지 14개 면은 광산군이 되었다. 그리고 1949년에는 부 지역이 광주시(市)가 되었고, 1986년에 광주직할시가 되었다.

1935년 이후 광주시는 광산군 지역을 지속적으로 편입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광산군은 1949년 나주군의 본

표 4. 대전시의 행정구역 변화 과정

연도별	주요사항
1914년	대전군 대전면(12면)
1926년	일부 편입(외남면)
1931년	대전군 대전읍
1932년	일부 편입(외남면)
1935년	대전부, 대덕군 분리
1940년	일부 편입(외남면, 산내면, 유천면)
1949년	대전시
1963년	편입(유천면), 일부편입(산내면, 회덕면)
1983년	편입(유성읍, 회덕면), 일부 편입(4면)
1989년	편입(대덕군)
2015년	5구 78동

출처 : 대전광역시,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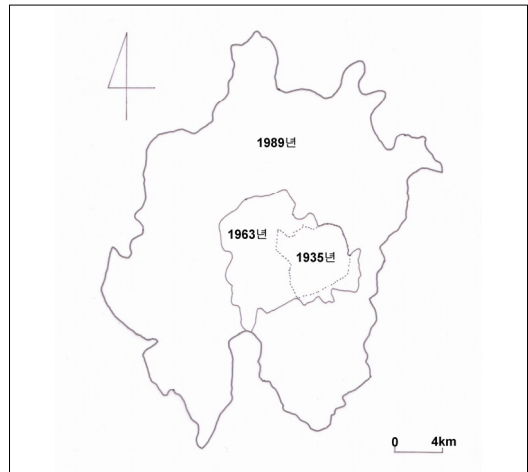


그림 4. 대전시의 지역 확장 과정

출처 : 대전직할시, 1992; 대전광역시, 2009; 2015.

량면, 삼도면, 평동면이 편입되어(101.31km²) 면적이 확장되었다. 광주시는 1988년 광산군 전체 지역을 편입하였다(표 3, 그림 3).

대전시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충청남도에는 14군 중의 하나로 대전군이 성립되었으며, 대전군은 대전면을 포함하여 12개면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대전면은 1931년에 대전읍(邑)으로 승격되고, 1935년에는 대전부(府)로 승격되면서, 나머지 11개 면지역은 대덕군이 되었다. 1949년에는 부 지역이 대전시(市)가 되었고, 1989년에는 대전직할시가 되었다. 1935년 이후 행정구역을 계속 확장해 왔는데, 1989년에는 대덕군 전체 지역을 편입하였다(표 4, 그림 4).

표 5. 3개 도시의 행정구역 면적 확대

(단위: km²)

도시별	1914년(면)	1935년(부)	1949년(시)	1980년(시)	2000년(시)
전주	1.76	9.57	25.61	105.91	206.24
광주	2.00	19.00	34.90	214.15	501.44
대전	5.71	11.36	35.71	88.21	539.83

출처 : 광주광역시, 2009; 2015; 대전광역시, 2009; 2015; 전주시, 2009; 2015.

표 6. 3개 도시의 인구 변화(1925-2015)

(단위: 명)

도시별	1914년(면)	1935년(부)	1949년(시)	1980년(시)	2000년(시)
전주	1.76	9.57	25.61	105.91	206.24
광주	2.00	19.00	34.90	214.15	501.44
대전	5.71	11.36	35.71	88.21	539.83

출처 : 국가통계포털.

2) 인구 변화

광주시의 경우 1925년도 광주군의 인구수는 115,371명이었고, 이 중 광주면은 23,734명이었다. 1935년 광주부의 인구수는 54,607명이었으며, 1949년 광주시는 10만 명을 넘게 되고, 1975년에 50만 명을 넘고, 1985년에는 90만 명을 넘게 되고, 1986년에는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대전시의 경우 1925년도 대전군의 인구는 97,409명이었다. 1935년 대전부 지역의 인구수는 39,061명이었으며, 대전시는 1949년에 10만 명을 넘게 되고, 1975년에 50만 명, 1985년에는 80만 명을 넘게 되고, 1989년에는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행정구역의 확장으로 1990년에 100만 명을 넘었다.

3. 3개 도시의 행정구역과 인구변화 비교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3개 도시의 행정구역 면적을 비교해 보면, 1914년(면)에는 대전-광주-전주의 순서로 나타나며, 1935년 부의 승격과 함께 특히 광주부의 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표 5). 해방 후인 1949년에는 3개 도시 면적이 모두 증가했으나 광주와 대전에 비해서 전주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게 설정되었다. 1980년에는 광주시의 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한 데 비하여 전주와 대전은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1980년대 광주(1986)과 대전(1989)은 직할시 승격과 함께 행정구역의 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 시기에 광주시는 2.3배가 증가하였고, 대전시는 6.1배가 증가하였다. 이에

비하여 전주시는 1.9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광주시의 행정구역 면적은 1935년 부 승격 시기와 1980년대 직할시 승격과 함께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대전시는 1980년대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이후 직할시 승격 시기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비하여 전주시는 급격한 변화없이 완만한 속도로 증가했다.

3개 도시가 인구 10만 명을 넘는 시기는 1949년으로 같지만, 인구 50만 명이 넘는 시기는 전주시가 1990년, 광주시와 대전시가 1975년으로 15년의 차이가 났다. 이후 1990년에 광주시와 대전시는 직할시의 승격과 함께 인구수가 100만 명을 넘게 되지만, 이 시기에 전주시는 52만명(1990) 수준에 머물렀다(표 6).

2010년도에는 인구수에서 대전, 광주, 전주의 순서로 대전이 광주를 앞서게 되었으며, 2015년 현재 전주시(66만), 광주시(150만), 대전시(154만)로 광주와 대전의 인구 규모는 전주시와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주시는 광주시와 대전시에 비해서 면적에서는 40% 수준이고, 인구수에서는 43% 수준으로 격차가 컸다.

III. 전주시의 상대적 저성장의 원인

1. 행정구역 제도의 변화와 영향

1) 1896년 13도제 실시에 따른 배후 지역 축소
1895년 23부제의 실시와 함께 전주군, 광주군, 대전군

표 7. 배후지역(도 지역)의 인구 변화

(단위: 명)

연도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1925년	1,369,010	2,158,513	1,282,038
1944년	1,674,692	2,749,969	1,675,479
1966년	2,521,207	4,048,769	2,902,941
1980년	2,287,689	3,779,736	2,956,214
2010년	1,777,220 (전주 포함)	1,741,499 (광주 분리)*	2,028,002 (대전 분리)*
	(전주시 : 649,728)	(광주시 : 1,475,745)	(대전시 : 1,501,859)

출처 : 국가통계포털.

* 광주시(1986)와 대전시(1989)는 직할시 승격과 함께 행정구역이 분리됨.

표 8. 1935년 3개 부군의 인구 및 면적 비중

1935년	전주			광주			대전		
	전주부	완주군	합계	광주부	광산군	합계	대전부	대덕군	합계
인구수(명)	42,387	151,024	193,411	54,607	101,561	156,168	39,061	87,769	126,830
비율	21.92%	-	-	34.97%	-	-	30.80%	-	-
면적(km ²)	9.57	1,016.98	1,026.55	19.00	380.81	399.81	11.36	528.62	539.98
비율	0.93%	-	-	4.75%	-	-	2.10%	-	-
인구밀도(명/km ²)	4,429	149	189	2,874	268	392	3,438	164	232

출처 : 국가통계포털.

* 인구밀도 = 인구수(명)/면적(km²).

이 탄생했고, 1896년 13도제의 실시로 전라도의 중심지역 역할을 했던 전주는 전라북도의 중심지로 배후 지역이 축소되었다. 인구 센서스가 처음 실시된 1925년의 인구수는 전북이 1,369,010명, 전남이 2,158,513명, 충남이 1,282,038명으로 전북은 전라남북도 인구의 39% 수준이었다(표 7). 그리고 절대적인 인구수가 가장 많았던 1966년을 기준으로 전라도(전북과 전남)의 인구수는 650만 명이었으나, 전주의 배후지인 전북은 250만 명, 광주의 배후지인 전남은 400만 명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 충남은 290만 명이었다.

이후 전북의 인구는 177만 명(전주시 포함)으로 감소하였고(1966년에 비해 75만 명 감소), 전남은 174만, 충남은 202만으로 역시 감소하였다(2010년 기준). 그러나 광역시로 분리된 지역을 포함하면 광주시를 포함한 전남 지역은 321만 명으로 1966년에 비해서 80만 명이 감소한 데 비하여, 대전시를 포함한 충남 지역은 352만 명으로 오히려 62만 명이 증가하였다. 즉, 중심도시를 포함한 전북과 전남 지역은 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한 데 비

하여, 충남 지역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전주시가 광주시나 대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성장을 한 원인의 하나는 1896년 13도제의 실시로 인한 배후 지역(도 지역)의 축소와 규모 차이, 그리고 인구 증감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2) 1935년 부군 분리 시기 부(府)의 면적 설정 문제

1935년 부군이 분리되기 전인 1930년도 인구수에서 전주군의 인구 규모(185,470명)는 광주군(134,843명)과 대전군(113,136명)에 비하여 컸으며, 읍 지역의 인구수도 전주읍(38,595명), 광주읍(33,023명), 대전읍(21,696명)의 순이었다. 그리고 1934년 부승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사된 인구수는 전주읍(39,877명), 광주읍(38,008명), 대전읍(34,532명)의 순이었다(전주역사박물관, 2003).

그러나 부군이 분리된 1935년에 전주부(42,387명), 광주부(54,607명), 대전부(39,061명)와 같이 전주부보다 광주부의 인구수가 더 많아졌다(표 8). 그러나 부와 군을

합한 인구수에서는 전주부+완주군(193,311명), 광주부+광산군(156,168명), 대전부+대덕군(126,830명)과 같이 전주 지역의 인구가 가장 많았다.

1935년 부군의 행정구역 분리 당시 전주부는 면적에서 전주군의 0.93%, 인구수는 21.92%를 차지하여, 광주부(면적 4.75%, 인구수 34.97%), 대전부(면적 2.10%, 인구수 30.80%)에 비해서 전주부의 행정구역 면적이 작게 설정되었고, 이것은 인구수에 영향을 미쳐 광주부가 전주부보다 인구가 더 많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인구밀도에서는 전주시가 4,429명/km²로 가장 높고, 대전시가 3,438명/km², 광주시가 2,874명/km²로 가장 낮다. 이것은 광주부나 대전부는 전주부에 비하여 인구수에 비하여 넓은 지역을 부(府)의 행정구역으로 설정했으나, 전주는 인구밀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행정구역이 작게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3개부의 1차 배후지역인 군 지역을 비교해 보면, 전주부의 배후지역인 완주군(1,016km²)이 광주부의 배후지역인 광산군(380km²)이나 대전부의 배후 지역인 대덕군(528km²)에 비해서 2배 이상 넓고, 인구밀도는 완주군이 149명으로 광산군(268명)이나 대덕군(164명)에 비해서 낮았다. 1차 배후 지역(군)의 인구가 도시 지역인 부 지역으로 1차적인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가장 인구수가 많은 완주군을 배후지로 하는 전주부의 성장 잠재력은 3개 도시 중 가장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35년 당시 2차 배후 지역(도)인 전북(1,607,236명)은 충남(1,526,825명)보다는 인구수가 많았지만, 전남(2,508,346명)에 비해서는 적었다.

이상과 같이 1935년 부군 분리 당시 전주부의 행정구역이 인구밀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게 설정되었고, 작은 행정구역과 그에 따른 인구수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진 인구의 누적 차이가 전주시가 상대적 저성장을 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행정구역 확대 과정에서의 차이

3개 도시의 주변 지역 편입과정을, 1914년 면의 형성 이후부터 1949년까지, 인구수의 절대적 증가 및 사회적 이동이 많았던 1950년부터 1980년까지, 광주시(1986년)와 대전시(1989년)가 직할시로 승격된 시기인 1981년부터 2000년까지의 3개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1단계(1914~1949)

1914년 3개 군의 도시 지역이 면(面)으로 지정되고, 1931년 읍(邑)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변 지역을 편입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1935년 부군으로 분리되기 이전 전주읍은 1930년 1개 면(상관면)의 일부를 편입하였고, 광주읍은 1923년과 1935년 3개 면(서방면, 효천면, 지한면)의 일부를 편입하였으며, 대전은 1926년과 1932년 그리고 1940년에 걸쳐 외남면을 편입하였다(표 9).

1935년 부군 분리 이후부터 1949년 사이에 전주부는 면적 37.4%, 인구수는 237.4%가 증가했으며, 광주부는 면적 54.4%, 인구수는 254.3%가 증가했고, 대전부는 면적 31.8%, 인구수는 321.8%가 증가했다. 즉, 1935년 이후 1949년까지 행정구역의 면적에서 광주시가 가장 많이 확장되었으며(54.5%), 인구수는 대전시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321.8%). 이 시기 대전부는 경부선(1905년)과 호남선(1914년)의 개통 그리고 충남도청의 이전(1932년) 등 사회적 요인이 인구 증가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49년 전주시(25.61km²)는 광주시(34.90km²)나 대전시(35.71km²)에 비해서 행정구역 면적이 2/3 수준이었다. 이것은 인구수에 반영되어 1949년 광주시, 대전시, 전주시의 순으로 인구 규모의 차이로 나타났다.

1914년 전주면의 면적(1.76km²)은 다른 면(광주면 2.0km², 대전면 5.71km²)에 비해서 작았으며, 이와 같은 행정구역의 면적 차이는 1935년 부군 분리 때에 더 확대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1949년까지 이어졌다. 결국 전주

표 9. 1914년~1949년의 행정구역 확장

	편입		면적변화(km ²)		인구변화(명)	
	완전 편입(년도)	부분 편입	1935년	1949년	1935년	1949년
전주	-	상관면	9.57	25.61	42,387	100,624
광주	-	서방면, 지한면, 효천면	19.00	34.90	54,607	138,883
대전	외남면(1940)	-	11.36	35.71	39,061	125,704

출처 : 광주광역시, 2009; 2015; 대전광역시, 2009; 2015; 전주시, 2009; 2015.

시는 광주시나 대전시에 비해서 행정구역의 설정과 이후의 확장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그 이후 더욱 누적되어 전주시가 상대적으로 저성장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2) 2단계(1950~1980)

1950년 이후 1980년까지 전주시는 2개 면의 완전 편입과 3개 면의 부분 편입이 이루어져, 1949년에 비해서 면적은 413.5%, 인구수는 364.9% 증가했다. 그리고 광주시는 6개 면의 완전 편입으로, 면적은 613.6%, 인구수는 523.9% 증가하였고, 대전시는 1개 면을 완전 편입하고, 2개 면을 부분 편입하여, 면적은 247.0%, 인구수는 518.5% 증가하였다(표 10). 이와 같이 1950년대 이후 1980년까지 30년 사이에 시의 면적이 가장 많이 확장된 곳은 광주시(613.6%)이고, 인구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 역시 광주시(523.9%)였다. 특히 이 시기에 광주시의 면적은 전주나 대전에 비해 2배 이상이었다.

3개 도시의 행정구역 면적의 차이는 1949년에 비해서 더욱 커졌으며, 인구수 역시 이와 비례해서 차이가 발생했다. 이 시기 행정구역의 면적이나 인구수의 성장에서

광주시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대전시는 면적 증가율(247.0%)은 전주시나 광주시보다 적지만 인구 증가율(518.5%)은 광주시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이 시기 광주시의 인구증가는 행정구역 면적 확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대전시는 행정구역 면적 확대 보다는 사회적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3) 3단계(1981~2000)

1980년대에는 1986년에 광주직할시 승격과 1989년 대전직할시의 승격이 이루어졌다. 광주직할시는 1988년에 1935년 분리되었던 광산군을 완전 편입하였는데, 광산군은 1949년에 나주군의 본량면, 삼도면, 평동면이 광산군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1935년 당시보다도 행정구역의 면적이 더 넓어진 상태였다. 대전시는 1989년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대덕군 전체를 편입하였다. 그러나 전주시는 1935년에 분리되었던 완주군의 19개 면 중에서 3개면(초포면, 우전면, 조촌면)을 완전 편입했고, 6개 면을 부분 편입하는데 그쳤다(표 11).

이 시기에 전주시는 면적 194.7%, 인구수는 167.9% 증가하였고, 광주시는 면적 234.2%, 인구수는 185.9% 증가하였으며, 대전시는 면적 612.0%, 인구수는 210.0%

표 10. 1950년~1980년의 행정구역 확장

도시별	편입		면적변화(km ²)		인구변화(명)	
	완전 편입(년도)	부분 편입	1949년	1980년	1949년	1980년
전주	초포면, 우전면(1957)	상관면, 용진면, 조촌면,	25.61	105.91	100,624	367,161
광주	극락면, 서방면, 석곡면(1955) 지산면, 서창면, 대촌면(1957)	-	34.90	214.15	138,883	727,600
대전	유천면(1963)	산내면, 회덕면	35.71	88.21	125,704	651,792

출처 : 광주광역시, 2009; 2015; 대전광역시, 2009; 2015; 전주시, 2009; 2015.

표 11. 1981년~2000년의 행정구역 확장

도시별	편입		면적변화(km ²)		인구변화(명)	
	완전 편입	부분 편입	1980년	2000년	1980년	2000년
전주	조촌읍(1987)	구이면, 상관면, 용진면(1980년대) 백구면, 용지면, 이서면,(1990년대)	105.91	206.24	367,161	616,468
광주	광산군(1988), 송정시(1988)	-	214.15	501.44	727,600	1,352,797
대전	유성읍, 회덕면(1983), 대덕군(1989)	-	88.21	539.83	651,792	1,368,207

출처 : 광주광역시, 2009; 2015; 대전광역시, 2009; 2015; 전주시, 2009; 2015.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광주와 대전은 면적이나 인구수에서 전주시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3개 도시 중 대전시의 면적 증가율(612.0%)과 인구 증가율(210.0%)이 가장 높았다.

1990년대 이후 광주시와 대전시는 더 이상의 행정구역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전주시는 주변 지역의 일부 편입이 계속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행정구역 면적에서 더 이상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3개 도시의 행정구역 면적이나 인구수의 절대적인 차이는 1949년 이전 보다 1950년대 이후에 더욱 극적으로 벌어지는데, 광주시의 경우 1950년대에 행정구역 확장(1955년, 1957년)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인구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져 대도시로 성장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인구 증가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에 행정구역의 확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차이가 있다. 즉, 광주시는 행정구역의 면적 확장이 도시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고, 대전시는 사회적 인구 증가가 도시 성장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전주시는 두 가지 조건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 결과 현재와 같은 차별적 저성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인구성장 차이에 미친 영향

1) 인구성장 과정

3개 도시의 행정구역 면적은 1914년 이후 점점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행정구역의 면적 차이는 인구수의 차이를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차이는 누적되었다. 전주시는 행정구역 확장이 서서히 조금씩 이루어진데 비하여, 광주시는 특히 1950년대에 급격하게 확장되었다. 즉, 광주시의 1950년대 행정구역 확장은 인구증가로 연결되어 광주시가 직할시로 성장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전시는 1983년 유성읍과 주변 지역을 편입하면서 행정구역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광주시와는 달리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수 증가와 그에 따른 인구밀도의 압박에 의해서 행정구역의 확장이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광주시와 대전시는 직할시 승격과 함께 1935년 이전 행정구역을 모두 포함하게 되었으나, 전주시는 급격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표 12).

인구밀도를 비교해보면, 1935년 부군 분리시에 전주부의 인구밀도가 가장 높았다(4,429명/km²). 이것은 당시 전주시의 면적을 더 넓게 잡았어야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전시의 경우에는 1980년에 인구밀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7,389명/km²), 이후 1983년 행정구역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광주시의 인구밀도는 1949년(3,979명/km²)에 가장 높았다.

3개 시 지역의 인구수는 1944년 전주부(67,095명), 광주부(82,431명), 대전부(76,675명)로 나타나지만, 주변 배후 지역을 합하면 전주부와 완주군(213,710명), 광주부와 광산군(190,454명), 대전부와 대덕군(160,961명)으로 이 시기까지는 전주 지역의 인구수가 가장 많았다. 1945년 해방과 1950년 6·25 사변을 겪으면서 광주시

표 12. 3개 도시의 행정구역 면적과 인구밀도

도시별		1914년	1935년	1949년	1980년	2000년
전주	면적(km ²)	1.76	9.57	25.61	105.91	206.24
	인구수(명)	-	42,387	100,624	367,161	616,468
	인구밀도(명/km ²)	-	4,429	3,929	3,467	2,989
광주	면적(km ²)	2.00	19.00	34.90	214.15	501.44
	인구수(명)	-	54,607	138,883	727,600	1,352,797
	인구밀도(명/km ²)	-	2,874	3,979	3,398	2,698
대전	면적(km ²)	5.71	11.36	35.71	88.21	539.83
	인구수(명)	-	39,061	125,704	651,792	1,368,207
	인구밀도(명/km ²)	-	3,438	3,520	7,389	2,535

출처 : 광주광역시, 2009; 2015; 대전광역시, 2009; 2015; 전주시, 2009; 2015.

* 인구밀도 = 인구수(명)/면적(km²).

표 13. 시와 군지역의 면적 비중

연도별	전주(km ²)	광주(km ²)	대전(km ²)
1914	전주면 : (1,76)	광주면 : (2,00)	대전면 : (5,71)
	전주군 : 1,026.55	광주군 : 399.81	대전군 : 539.98
1935	전주부 : 9.57	광주부 : 19.0	대전부 : 11.36
	완주군 : 1,016.98	광산군 : 380.81	대덕군 : 528.62
1949	전주시 : 25.61	광주시 : 34.90	대전시 : 35.71
	완주군 : 1,000.94	광산군 : 466.28	대덕군 : 504.27
1960	전주시 : 105.91	광주시 : 279.25	대전시 : 35.71
	완주군 : 920.64	광산군 : 221.93	대덕군 : 504.27
1980	전주시 : 105.91	광주시 : 214.15	대전시 : 203.80
	완주군 : 920.64	광산군 : 287.03	대덕군 : 336.18
2000	전주시 : 206.24	501.44	539.83
	완주군 : 820.31		
전체 면적	전주시+완주군 =1,026.55	1949년 까지 : 399.81	대전+대덕 = 539.83
		1949년 이후 : 501.44	

출처 : 광주광역시, 2009; 2015; 대전광역시, 2009; 2015; 전주시, 2009; 2015.

의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어, 1955년에는 광주시 뿐 아니라 1차 배후지역인 군 지역을 포함한 인구수에서 전주를 추월하게 된다. 주변 행정구역의 편입(1955년, 1957년)은 광주시 인구 증가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였고, 이러한 광주시의 행정구역 확장으로 광산군은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3만 명 수준으로 제자리 걸음하는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즉, 1950년대와 1960년대 광주시와 광산군의 인구증가는 광주시의 행정구역 확장에 의해서 광주시의 인구 증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표 13).

1960년대 이후 이촌향도와 산업화 과정을 거친 1980년에는 전주시(367,161명), 광주시(727,600명), 대전시(651,792명)로 인구 차이가 2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광주시의 인구 증가는 1945년의 해방과 6·25 사변과 같은 사회적 요인과 함께 1950년대의 행정구역 확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반면 대전시는 행정구역의 확장 보다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성장이 이루어졌으며, 1983년 유성읍 등을 편입하면서 1975년 50만 명 수준에서 불과 10년 사이인 1985년에 86만 명으로 성장하였다. 대전시가 1989년 직할시로 승격되는 데는 1983년의 행정구역 확장이 큰 역할을 하였다.

2) 배후지역의 인구 규모와 중심성의 차이

1935년에 부군이 분리되고, 1986년과 1989년에 광주시와 대전시가 각각 직할시로 분리될 때까지 3개 도시의

배후지역은 1935년에 분리되었던 군 지역(1차)과, 해당도 단위(2차)의 행정구역이었다. 이러한 배후 지역은 이촌향도에 따라 해당도시의 인구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광주 지역(광주시+광산군)이 전주 지역(전주시+완주군)의 인구수를 넘어선 시기는 1950년대이고, 대전 지역(대전시+대덕군)이 전주 지역의 인구수를 넘어선 것은 1960년대이다. 그리고 시지역과 군지역의 인구수 역전 현상(시 지역의 인구수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시기는 전주시가 1960년인데 비하여, 광주시와 대전시는 1949년이였다. 이것은 전주시에 비해서 광주시와 대전시가 배후 농촌지역의 인구 흡인력과 도시 집중 현상이 더 강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14).

3개 도시의 2차 배후 지역인 전북(전주), 전남(광주), 충남(대전)의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전남의 인구규모가 가장 커서 1925년에 200만을 넘어섰으며, 최대 인구 시기인 1966년에는 400만을 넘어섰다. 충남은 전북보다 인구수가 적었으나, 1944년에 전북을 넘어섰으며, 1985년에 최고인 300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비하여 전북은 1944년에 충남에 추월당하고, 1966년 인구 최대수인 250만 명에 이르게 된다(표 15).

전북은 인구최대 시기인 1966년 252만 명에서 2010년 178만 명으로(-29%), 전남은 400만 명에서 170만 명으로(-57%), 충남은 29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31%) 각각 감소하였다. 그러나 광주와 전남의 인구를 합한 수가

표 14. 3개시와 주변군의 인구 합계 비교

(단위: 명)

연도별	전주			광주 (광주시+광산군)	대전 (대전시+대덕군)
	전주시	완주군	합계(전주+완주)		
1925	22,683	166,135	166,135	139,105	106,023
1935	42,387	151,024	193,411	156,168	126,830
1949	100,624	178,559	279,183	268,597	226,292
1960	188,216	168,013	356,229	409,283	353,352
1980	367,161	152,268	519,429	856,545	803,954
2000	616,468	79,137	695,605	1,352,797	1,368,207
2010	649,728	83,408	733,136	1,475,745	1,501,859

출처: 국가통계포털.

표 15. 3개 도시와 도 지역(배후 지역)의 인구 규모와 비중 변화

연도별	전주시	전북	광주시	전남	대전시	충남
1935	2.64%	1,607,236	2.18%	2,508,346	2.56%	1,526,825
1949	4.91%	2,050,485	4.56%	3,042,442	6.20%	2,028,188
1960	7.80%	2,395,224	8.85%	3,553,041	9.06%	2,528,133
1970	10.79%	2,386,381	12.55%	3,932,540	14.49%	2,808,345
1980	16.05%	2,287,689	19.25%	3,779,736	22.05%	2,956,214
1990	25.00%	2,069,960	31.24%	3,646,442	34.26%	3,063,504
2000	32.61%	1,890,669	40.39%	3,349,253	42.58%	3,213,528
2010	36.56%	1,777,220	45.87%	3,217,244	42.55%	3,529,861

* 광주시와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한 1990년도 이후에는 광주+전남, 충남+대전의 인구를 합한 숫자임.

2010년에 320만 명으로 인구 최대 시기인 1966년의 400만에 비하여 약 80% 수준(-20%)으로 인구가 감소한 데 비하여, 대전과 충남의 인구를 합한 수는 2010년에 350만 명으로 인구 최대 시기인 1985년의 300만에 비하여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전북의 경우 인구 최대 시기(1966년)에 비해서 71% 수준, 전남과 광주는 80% 수준으로 감소한 데 비하여, 충남과 대전은 118%로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전주시는 295%, 광주시 370%, 대전시 484%의 인구증가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60년대 이후 이촌향도에 의한 인구 이동 과정에서 지역 중심도시의 인구흡수율이 도시의 인구성장 차이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도시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하여, 전주시의 1차 배후 지역인 완주군은 1966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광주시의 배후 지역인 광산군은 인구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대전시의 배후 지역인 대덕군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였다.

도시 지역 인구의 비율은 1935년 부군의 행정구역 분리 시에는 약 2% 대로 3개 도시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이지만, 1966년 전주시 22만 명(전북 인구의 약 9%), 광주시 40만 명(전남 인구의 10%), 대전시는 31만 명(충남 인구의 11%)으로 비중이 증가했다. 2010년에는 전주시 65만 명(전북인구의 36.6%), 광주광역시 148만 명(전남과 광주 인구의 45.9%), 대전광역시 150만 명(충남과 대전 인구의 42.5%) 수준으로 인구집중도의 차이가 더욱 커졌다. 특히 대전은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집중이 빠르게 진행되어 다른 지역보다 빨리 1966년에 10%대를 넘게 되고, 광주와 대전이 직할시로 승격되기 이전인 1985년에 도시 인구 집중률에서 대전 28.9%, 광주 24.1%, 전주 19.4%에 이르렀다. 즉, 전주는 상대적으로 배후지역인 전북에서 도시 지역인 전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약했다. 2010년 전주시의 인구는 649,728명인데, 광주의 도시 집중률 45.9%를 적용하면, 전주시의 인구는 815,744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광주와 대전은 직할시로 승격된

표 16. 도 단위 배후지역에서 3개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

2010년	전주시		광주시		대전시	
	전북(전주제외)	전주	전남	광주	충남	대전
인구수(명)	1,127,492	649,728	1,741,499	1,475,745	2,028,002	1,501,859
비율(%)*	-	35.56	-	45.87	-	42.55
면적(km ²)	7,861	206,01	12,312	501,24	8,214	539,90
비율(%)*	-	2.55	-	3.91	-	6.17

* 전북 전체 면적 : 8,067.01km².

** 비율 = 해당시 인구(면적)/전체(시와 도 포함).

이후 도시 지역 집중도가 20%대에서 40%대로 급격하게 증가한 데 비하여, 전주는 완만하게 증가하여 30%에 머물렀다.

1966년과 2010년의 45년 사이에 전라남도의 급격한 인구 감소(-57%)와 광주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370%)는 전남 지역의 인구가 지역 중심 도시인 광주시로 흡수되었음을 보여준다. 충남 역시 1989년 대전 직할시의 행정 구역 변화로 300만에서 200만 명대로 급격하게 감소한다. 전북의 경우 감소율이 -29%이지만, 전라북도 인구에서 전주시를 제외하면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율은 -55% 수준으로 전남과 비슷하다. 이러한 인구 감소율을 적용해 보면 이 시기에 전남이 228만 명(-57%), 전북이 138만 명(-55%)이 감소했고, 이러한 인구가 지역 내의 중심 도시 및 타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구가 이동 과정에서 광주시는 전주시 보다 더 많은 인구수를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충남의 인구수는 감소했지만, 대전시의 인구증가율이 484%로 아주 높게 나타나는 것은 배후 지역의 인구 흡수와 함께 외부 인구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즉, 광주시와 전주시는 배후 지역의 인구 흡수에 의해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다면, 대전시는 배후 지역과 함께 다른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1985년과 2010년을 비교해 보면, 광주시가 직할시로 분리되기 전인 1985년 광주와 전남의 인구 합계가 약 375만 명에서 2010년에는 약 321만 명으로 감소한 데 비하여, 대전시와 충남은 1985년 약 300만 명에서 2010년에는 352만 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대전시는 철도 및 고속도로의 개통과 분기점으로 성장의 동력이 제공되었으며, 수도권과의 거리 등과 같은 입지적 요인, 그리고 대덕연구단지 등 행정정책적인 측

면이 크게 작용하여 인구의 유입에 의한 도시 성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광주시와 전주시는 철도교통에서 직접적인 혜택보다 간접적인 혜택을 보았으며(익산, 송정 분기점), 고속도로의 혜택 또한 늦고 제한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 전주는 광주나 대전에 비해 지역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라북도에서 전주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면적에서는 2.55%, 인구수는 35.56%를 차지한다. 그러나 광주시의 경우에는 면적 3.91%, 인구수는 45.87%를 차지하고, 대전시는 면적 6.17%, 인구수는 42.55%를 차지한다(표 16). 이와 같이 2차 배후지역인 도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 전주시는 광주시나 대전시에 비해서 면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인구의 집중도 역시 떨어진다. 이와 같은 지역 내에서의 중심성의 차이는 전주시가 상대적 저성장을 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전라도 지역의 중심 도시였던 전주시가 1900년대 이후 주변의 광주광역시나 대전광역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성장을 한 원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구역 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배후지역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1896년의 13도제의 실시로 인하여 배후지역이 전라도에서 전라북도로 축소됨으로써 배후 지역의 중심도시로서 도시 성장의 한계가 나타났다.

둘째, 1935년 부군 분리 시에 인구밀도에 비해서 전주

부의 행정구역을 상대적으로 좁게 설정했다. 그 결과 인구규모 차이와 이후의 지속적인 누적 차이를 가져왔다. 1935년 전주부로 승격할 때 인구수와 인구밀도에 비하여 행정구역을 좁게 설정한 것은, 이후의 도시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 행정구역의 확대 과정에서 전주시는 확장 속도와 시기가 늦었고, 그 결과 전주시가 대도시로 성장하는데 한계로 작용했다. 전주시는 광주시나 대전시에 비해서 행정구역의 면적이 작았으며, 확장 시기도 10년 정도 늦었다.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행정구역의 확장과정으로 인하여 1960년대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배후지역의 인구증가와 인구이동을 수용하지 못했으며, 배후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구역의 확장이 도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광주광역시와 비교된다.

넷째, 1960년대 이후 일어난 이촌향도에 의한 혜택이 제한적이었다. 광주시나 대전시는 지역 내에서 중심도시로서 중심성이 높아 주변 배후지역인 군과 도 지역의 인구를 적극적으로 흡수한 데 비하여, 전주시는 상대적으로 배후지역의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중심성이 약하게 작용했다. 특히 대전시는 위치적 특성으로 인한 각종 사회기반시설 구축의 혜택을 받아 외부 인구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전주시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불리하였다.

이상과 같이 전주시가 주변의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와 같이 대도시로 도시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은 1896년 13도제의 실시로 인한 배후지역의 축소, 전주시의 기반이 되는 1914년 전주면과 1935년 전주부의 행정구역 범위를 좁게 설정했었던 점,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하기 전인 1960년대 이전에 행정구역의 확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배후지역의 인구이동을 흡수하지 못한 점, 위치적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요인에 의한 외부 인구 흡인력이 약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주시 상대적 저성장의 다양한 원인 중에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1900년대 이후 행정구역의 설정과 인구변화에 한정해서 살펴봤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참고문헌

강신호·中越信和·고성철, 2000, “도시화에 따른 대전시

- 토지이용의 변화,” 한국환경생태학회지, 14(2), 154-161.
- 광주광역시, 2009, 「광주광역시 통계 연보」.
- 광주광역시, 2015, 「광주광역시 통계 연보」.
- 광주직할시, 1992, 「광주시사 1권」.
- 권선정, 2016, “근·현대지도를 통해 본 대전의 지역 변화와 도시 정체성,” 문화역사지리, 28(4), 53-68.
- 김광우, 1994, “20세기초 광주시가지 형성에 관한 계획사 연구,” 국토계획, 29(3), 125-146.
- 대전광역시, 2009, 「대전광역시 통계 연보」.
- 대전광역시, 2009, 「통계로 본 대전 60년사(1953-2008년)」.
- 대전광역시, 2015, 「대전광역시 통계 연보」.
- 대전직할시, 1992, 「대전시사 1권」.
- 박성오, 1986, “전주시 동서관통로 개설에 따른 CBD 내부구조 변화 및 성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연수, 1997, “시·공입체모형에 의한 한국의 도시성장 결정요인 분석,” 지역연구, 13(2), 93-118.
- 백영기·은석인, 2017, “전주시 공간구조의 변화, 1996-2014년,”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 45-60.
- 손정렬, 2010, “낙후지역 도시들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 한국 낙후지역의 전략도시들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3(1), 31-47.
- 신동호, 2017, “경로의존론과 지역회복력 개념: 지역격차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1), 70-83.
- 우양호, 2016, “대도시의 도시성장 결정요인 및 발전방향 탐색,”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21.
- 윤병훈·박관우·남 진, 2014, “차별적 도시화 모델을 통한 국내도시의 도시성장단계 평가,” 2014 도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집.
- 이경찬, 1997, “전주시가지 격자형 토지구획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기원론적 고찰,” 국토계획, 32(4), 75-89.
- 이현옥, 2007, “광주시 신시가지구의 성장과 공간구조의 변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69-87.
- 장명수, 1994, 「성곽발달과 도시계획 연구: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서울: 학연문화사.
- 장문현·이민석·김화환, 2016, “지방 대도시의 도시재생정책 지원을 위한 쇠퇴지표 적용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50(4), 455-473.
- 전주시, 1964, 「전주시사」.
- 전주시, 1974, 「전주시사」.

- 전주시, 1986, 「전주시사」.
- 전주시, 1997, 「전주시사」.
- 전주시, 2009, 「전주시 통계 연보」.
- 전주시, 2014, 「국역 전주부사」.
- 전주시, 2015, 「전주시 통계 연보」.
- 전주역사박물관, 2003, 「일제시대 전주부 신설관계 자료집」.
- 전주역사박물관, 2009, 「전주시 60년 일지(1949-2009)」.
- 정환용, 2003, “한국의 도시성장단계에 관한 연구,” 한국 지역개발학회지, 15(2), 205-228.
- 조상필, 1994, “지역발전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정규, 2002, “광주 충장로와 금남로의 경관변화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경식, 1978, “도시토지이용과 기능구조에 관한 다변분석 연구 -대전시를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8, 1-35.
- 주경식, 1985, “대전시의 내부구조,” 지리학연구, 10, 299-330.
- 주상현, 1998, “전주시 도시성장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4, 81-98.
- 충청남도, 1997, 「충청남도 개도 100년사(1896-1996)」.
- 최병호·장영재, 2005, “도시성장의 공간적 격차와 도시규모분포에 관한 실증분석,” 경제연구, 23(4), 187-207.
- 越智唯七, 1917, 「新舊對照 朝鮮全道 府郡面里洞 名稱」, 京城: 中央市場.
- Hall, P. and Hay, D., 1980, *Growth Centres in the European Urban Systems*, London: Heinemann Educational Books.
- van den Berg, L., Drewett, R., Klaassen, L.H., Rossi, A., and Vijverberg, C.H.T., 1982, *Urban Europe: A Study of Growth and Decline*, Oxford: Pergamon Press.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go.kr>
- 교신 : 조성옥,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chosswv@jbnu.ac.kr)
- Correspondence : Sungwook Cho, 54896,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 Jeollabuk-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chosswv@jbnu.ac.kr)
- 투 고 알: 2017년 6월 27일
- 심사완료알: 2017년 7월 24일
- 투고확정알: 2017년 8월 1일

